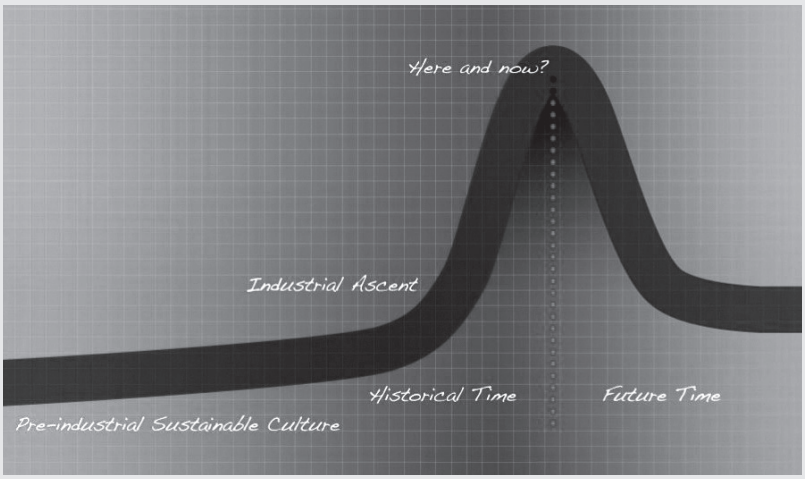
1/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출

제로성장기 일본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다케다 하루히토



출처: http://ourworld.unu.edu/jp/the-end-of-the-growth

다케다 하루히토(武田晴人) 1949년 4월 도쿄에서 태어났다. 1979년 3월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후, 1988년 7월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전공은 일본경제사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조수, 동 경제학부 조교수를 거쳐 1991년 6월에 교수로 부임했다. 2015년 3월 도쿄대학을 정년퇴임하고,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1. 머리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일본경제의 '불황'은 장기화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경제를 측정하는 지표인 GNP나 GNE에 근거해서 보면, 그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벗어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가 전체의 양적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 국민 1인당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지표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더라도 성장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거의 반세기 동안 사용해온 지표인 GNP나 GNE로 측정하는 한 현재의 일본에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민당 정권은 '저성장', '정체'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에게 '아픔'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왔다.

일본경제의 현상은 정말 심각한 상황일까? 양적 확대에 사로잡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한 방책을 고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일본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경기침체의 요인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고용에 대한 사용자 측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재계 등에서 활발하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기업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럴듯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에 따른 정책은 본론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검토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일본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대처해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경제발전과 경제성장

미국의 경제학자인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경제발전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경제발전에는 ① 최저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복지 개선, ② 문맹·질병·조기사망과 관련된 대중의 빈곤 퇴치, ③ 기본 생산구조에서 농업에서 공업 활동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투입·산출 구성의 변화, ④ 생산적인 고용이 특권적인 소수 계급에 의해서라기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의 조직화, ⑤ 경제 혹은 여타 분야에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더 광범한 그룹의 참여 등의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1] 즉 경제적 풍요로움의 향상,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건강 등 삶의 질 보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그에 따른 광범한 고용기회의 창출,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보 등이 보장되는 상태를 '경제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킨들버거는 경제사회가 '발전'한다는 의미를 이러한 지표로 명확하게 한 후에, 20세기 중반부터의 경제발전은 그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범위와 패턴을 미리 정하고, 진로가 정해진 사회변화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즉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을 주요 지표로 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본래의 정의에서 멀어진 채 양적 경제규모의 확대에 중점을 둔 평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킨들버거는 "규모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발전의 실패, 좌절과 과오의 가능성을 여는" 것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경제발전으로부터의 일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킨들버거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2] 즉, 전자는 주로 생산량의 증대를 의미하고, 그 기반이 되는 능률의 향상 및 원단위(元單位, basic unit) 개선 등의 진전이라는 경제변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후자는 산출량의 증대와 함께 그것이 생산, 분배되는 기술적·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단적으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준별하는 것이라 해도 되지만, 거기에는 질적 변화

1 C.P.キンドルバーガー·B. ヘリック, 山本登監 訳, 『経済発展論』 改訂版, 好学社, 1981, 1쪽(원서는 Charles P. Kindleberger and Bruce Herrick, *Economic Development*, 3rd ed., McGraw-Hill, 1977.

2 山本登監 訳, 『経済発展論』, 2~3쪽.

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함의가 있다. 비유하면, 인간의 성장에 대해 전자는 '신장과 체중'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좀 더 기능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의 변화에 관심을 둔다는 의미다.

킨들버거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실현하는 데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빈곤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과 삶의 방식 그 자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 의미로서의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상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선진적 경제구조로 추격(catch-up)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온 경제발전에 대한 의미를 현대에는 선진국의 미래상에 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양적인 성장일변도를 추구해온 개발도상국은 이제 질적인 풍요로움을 바람직한 경제발전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다.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현재의 선진공업국이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획득했던 내용을 검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발전'의 본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년 전 킨들버거의 문제제기는 일본경제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유용할 것이다.

3. 종래 관점의 한계

1) 경제성장정책의 역사

경제 문제를 검토하는 지표 가운데 최고봉은 '경제성장'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정책상 혹은 경제학의 전문용어로 '경제성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다.[3] 그 전까지는 그러한 지표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기준 틀이 없었다. 이는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데릭 복(Derek

3 武田晴人, 『国民所得倍増計画を読み解く』, 日本経済評論社, 2014.

Bok)은 『행복의 연구』(*The Politics of Happiness*)[4]에서 "경제성장이 정부정책의 목표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국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경기순환의 억제와 대량실업의 회피라는 장기간 우선시되던 정책을 대신하여 성장이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제2차 대전 직후 우려했던 불황이 나타나지 않자, 지속적인 성장 예상에 대한 의심이 낙관주의에 길을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 반세기 이전부터 경제문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가 된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로서 '왕좌'에 올랐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념이 생성된 이유는, 성장에 따른 산출량의 증대가 다양한 경제문제의 해결책이자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완화하고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심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고용기회의 창출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장이 그 해결책이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빈곤과 기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이는 성장의 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경제성장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파이를 크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적 과제처럼 되었다. 국민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자신들의 생활개선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공통의 목표로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새롭게 제정된 헌법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바이마르헌법에 기원을 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였다. 그리고 그것은 고도성장을 통해 실현

4 デレック·ボック, 『幸福の研究』, 東洋経済新報社, 2011(원저는 Derek Curtis Bok,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한글 번역서로는, 추홍희 옮김,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지안출판사, 2011이 있다. -역자).

되어온 것처럼 보였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인 듯한 착각을 낳았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정책 선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경제성장이 목표로 하던 '국민생활의 개선'이라는 과제가 잊혀진 채 성장이 자기목적화됨으로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경제성장은 그 왕좌에서 내려올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퇴위를 거부하고 있다. 제로성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직시하지 못한 채 과거의 망령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왕좌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더는 찾을 수 없고, 경제성장의 추구 그 자체에 현실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각종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불황하에 반복해서 실시해온 재정 면에서의 경기자극 정책이 있다. 재정 재건이 우선과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압력과 경제침체가 내각의 평판을 떨어뜨려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정부는 무모한 재정지출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의 악화를 억제했다'고 정책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반복되었고, 게다가 선진국 중에서도 전례 없는 거액의 정부 채무가 누적되었다. 때문에 더는 재정 면에서 수요창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효과 없는 투약을 계속하는 처방전에 매달려온 정부와 재계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정책을 대신하여 기대를 모은 것은 금융정책이었다. 그러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 취임 후 일본은행에 의한 '상상을 초월하는'(異次元)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당초에는 주가 상승과 엔저의 진행 등에서 정책효과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경기의 개선이 해외요인에 의한 것이며, 국내의 금융완화는 주가 상승으로 미니 거품을 발생시켰을 뿐이고 실물경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봄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이라는 대담한 정책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으로도 국내의 체

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았고, 환율 동향만이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

원래 그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혹은 엔저로 수출기업에게 약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더라도, 그로 인해 일본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은 없다. 외화 부족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미시적으로 기업의 이윤 증대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고용 확대와 소비 증가 등 국민경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막대한 과잉설비를 떠안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설비투자를 서둘러야 할 정도의 시장 확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수요 부족'이라는 성장의 족쇄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 달성될 수 없고 가계소비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 공허하게 들리는 '전국민이 활약하는 사회'(一億総活躍社会)

이러한 와중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도 늦어지고 있다. 새로운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향후 일본경제가 축소균형에 빠질 것이라는 '암담한' 시나리오로 집약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미래의 노동인구 감소로 귀결되는 것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 생활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인 동시에 부양인구의 감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15세부터 65세까지를 노동(생산)가능인구로 보는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 결론에 지나지 않는다.[5] 고도성장기에 아이들의 진학률 상승에 따라 청년층 노동자의 추가적인 공급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 시대에는 전업주부가 바람직한 여성상이었다. 그 결과 노동인구는 장기간 전 인구의 2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이 수준은 현재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

5 이 점에 대해서는 武田晴人, 『脱成長神話』, 朝日新書, 2014, 제5장 참조(한글 번역서로, 여인만 옮김, 『성장 신화로부터의 탈출』, 도서출판 해남, 2016이 있다. -역자).

런데 고령자와 여성에게 각각의 능력과 의욕에 맞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동인구의 감소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국민경제 규모의 확장이 지상명제라면 노동인구 감소가 우려할 만한 일일지 모르나,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인구의 감소나 인구구성의 고령화는 심각한 제약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러한 냉정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감을 부추겨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돌리려는 한편, '세 개의 화살' 혹은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이라는 공허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권의 연명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조치를 제안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응책으로 선전하는 '전 국민이 활약하는 사회'(一億総活躍社会)[6]라는 이미지뿐인 정책목표가 어떤 형태로 사람들의 생활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명확하지 않다. 슬로건과 말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확충에 의해 그와 관련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생활의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음의 두 가지 장점은 확실한데, 그와 함께 거기에 내포된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장점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는 일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낳자, 키우자'라는 제2차 대전 중의 슬로건은 전쟁을 계속할 병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것처럼, '전 국민이 활약하는 사회'에 담긴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시책은 세계경제에서 싸울 기업전사를 낳으라는 것일까? 개인의 자율적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할 권한은 없다. 이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시대착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6 内閣府, 홈페이지(http://www.kantei.go.jp/jp/headline/ichiokusoukatsuyaku/)(검색일: 2016. 5. 4)

출처: http://elution21.rssing.com/chan-11452940/all_p40.html

또 하나의 장점은, 새로운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섀도 워크'(shadow work)화하고 있는 주부노동이 국민경제계산에서 부가가치로 산입되는 것이다. 그만큼 GDP가 커져 계산상으로는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목표가 달성되므로 정부에 유리하다.

그러나 육아 등의 가사노동을 타인에게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이의 양육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자기 아이를 키우는 데 엄마가 들이는 시간이나 보육·육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자면 육아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규모의 확대로도 직결된다. 고용된 사람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고용량에서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해 빼앗긴 고용기회가 다른 분야에서 보전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가사 등의 섀도 워크 부분을 넣어서 생활수준을 실질적인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 GDP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수준이 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아도 증가할 수 있는 지표인 것이다. '전 국민이 활약하는 사회'라는 정책에는 오히려 여성의 삶의 방식을 하나로 묶어버리려는 '악의'마저 느껴진다. 즉, 일도 하고 지원도 받으면서 육아도 하는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이라는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전업주부를 뒤집어놓은 것 같은 성인여성상을 유일하게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만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선택하거나 전업주부를 선택하거나 혹은 둘 다 양립시키려는 것 모두 우열 없이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진보인 것이다. '전 국민이 활약하는 사회'라는 슬로건이 목표로 하는 여성상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되풀이하지만, 모든 성인여성에게 양립을 기대하는 것은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 사회'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의 대기아동문제[7]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심할 정도다. 양립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을 빈약한 복지정책에 의해 정부 스스로 봉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이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적이고 현실감각을 잃은 정부의 대응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 불만의 목소리가 작을 때에는 문전박대를 하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변하던 정부는 이 소리가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무시할 수 없게 커지자 국정과 선거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대책을 세운다고 분주하다. 그 모습은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이라기보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뿐인 선거 대책으로 인기를 회복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여기서 밝혀진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이 구체적인 시책 입안을 위한 현황분석조차 불충분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충

7 『朝日新聞』 디지털판의 해설(asahi.com/special/taikijido/) 참조.

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후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등의 땜질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여성들이 결정할 일이나, 그 결정을 위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선택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처는 이와 같은 참상인 것이다.

3) 편의적인 규제 완화

성장률 둔화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추구해온 처방전 중 하나가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성장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창의성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의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기대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신앙에 가까운 사상이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갖던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정·재계가 이러한 사상에 성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즉흥적이고 자기본위의 편의주의가 통용되어왔다고 할 것이다. 케인지언(Keynesian)적인 발상에 근거한 재정 확장이 반복되고, 소비 환기를 명목으로 하는 선거대책용 선심성 살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파산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자금까지 투입하면서 구제를 반복해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근거한 정책체계를 철저하게 채용한 적은 없었다. 신자유주의는 '그때그때의 상황 논리'로 편리한 때만 참조했기 때문에, 정책체계의 이념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일관성도 부족해서 결국 파탄을 맞았다. 1980년대의 민영화가 노동조합의 최대 세력이던 국철노동조합의 해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은, 규제 완화나 '작은 정부론'이 정책의 실제 의도를 가리는

간판이고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8]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규제 완화 등의 정책체계가 충분히 실시되더라도 그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경제학자와 정치가가 일본에는 없다.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은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자'라는 책임회피뿐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맡기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인데, 그러한 믿음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정책주체는 그 구체적인 효과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할지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 한 적은 없다.

4) 악화되는 기업의 경영능력

예를 들어,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법인세 인하가 효과적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장기 불황이라는 말에 현혹되기 십상이지만, 법인기업통계에 따른 법인기업의 경상이익률은 다소의 진폭을 보이면서도 2000년대에 걸쳐 상승하고 있다.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9] 2000년대 중반에는 거품경제의 절정기인 1989년의 이익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1990년대 말에 법인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경상이익에 대한 과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기업부문에 의한 적극적인 투자는 창출되지 않았다. 규제 완화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자유를 획득했던 민간기업은 주주들의 배당을 확보하는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10]

8 武田晴人, 『新版 日本経済の事件簿』, 日本経済評論社, 2009, 제15장 참조.

9 武田晴人, 『脱成長神話』, 136쪽. 또한 법인기업통계에서 '경상이익'은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적자기업의 적자액을 흑자기업의 이익액과 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흑자기업만의 이익액 합계보다 너무 적어져, 결과적으로는 세금부담액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 이러한 기업행동은 1990년대부터 강해진 '기업은 주주의 것'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만들어졌

이것이 현실이라면 앞으로 이같은 시책을 지속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증가한 이익은 오로지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의 변제에 쓰이고 있다. 표준적인 경제학 교과서가 투자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기업부문은 이제는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여 '저축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11] 그 결과, 가계저축과 기업저축이 엄청난 정부 채무를 지탱하여 그 자체로 자금순환이 완결되고 있다. 이 세 경제주체 간의 대차(貸借)관계를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는 법인의 저축 증가에 의해 금융부문에 추가적인 국채소화능력을 창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싶어질 정도다. 즉, 법인세 감세는 거액의 국채 발행을 계속해야만 하는 재무성의 '음모'일지도 모른다. 고용불안으로 가계가 미래에 대비한 예금을 무리해서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저축의 증대는 국가의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바람직한 자금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도가 빚을 변제하기 위해 빚이 불어나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직시한다면 국민경제를 개선하는 발전적인 계기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업저축으로 국채를 소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감세를 하지 않고 국채발행액도 줄이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는 선택일 것이다.

또한 고용에 대한 자유도를 높이려는 노동법제도의 '개혁'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임금은 비용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혹은 수익력을 확실히 좌우한다. 그로부터 단선적으로 임금 인하가 경쟁력 강화와 수익력 회복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비용이 낮은 것

다. 그러나 경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능은 단순히 자금에 대한 수익을 낳는 기계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고, 그에 따른 고용의 창출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능에 입각한 기업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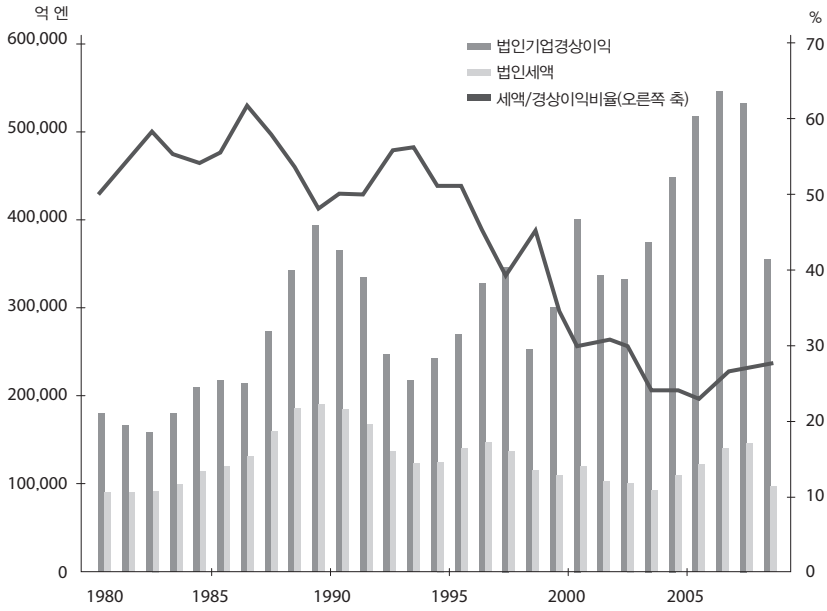
11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저축주체인 가계부문이 2000년대에 들어 수입이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이토 미쓰하루(伊東光晴)가 지적하고 있다(伊東光晴, 『日本経済を問う』, 岩波書店, 2006, 126쪽). 물론 이는 가계가 투자주체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주택차입금 등의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수익을 확보하면서 저축에는 초저금리를 부과함으로써 가계부문의 이익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자를 낳지 못하는 가계부문의 저축이 국가재정의 채무초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국채의 저금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가계가 실질적으로 과세에 의해 국채의 대량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임금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다. 이 자명한 이치를 고용개혁을 논하는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심각한 고용불안을 낳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임금비용은 명목임금(시간당 임금)과 노동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도 두 배의 생산성이 실현되면 임금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임금을 인하해도 임금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노동의욕이 떨어져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의 불만만이 증가한다. 임금이 낮아지는 분만큼 노동자의 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인원을 감축해 1인당 업무량을 늘림으로써 임금비용을 낮추려고 해도 삭감된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으면 생산은 감소하고 비용은 올라간다. 인원삭감을 잔업으로, 즉 장시간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할증으로 지불하는 초과근무 수당의 임금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낮은 임금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생산성 상승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고 있든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생산성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할 수 없는 경우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라면, 경영을 태만히 하여 혁신적인 기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단순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영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라면 원래 그 산업이나 기업을 존속시킬 의미가 적다. 머지않아 파탄에 처할 산업이나 기업의 연명을 위해 근로자 전반에 인정해 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투자를 저해하고 특히 해외에서의 경쟁에 마이너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자사제품의 품질에 자신이 없는 기업이 그러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메이드 인 재팬(재화), 유즈 인 재팬(서비스)이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샤프(Sharp) 등 가전업체가 국제경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국내의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림 1〉 법인기업의 경상이익과 법인세
출처: 국세통계 및 법인기업통계에서 작성함.

사람들의 망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경쟁상대인 이웃나라 유력 기업의 경영 노력에 표해야 할 경의를 결여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고임금이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세금이 줄어도 투자가 높아지지 않는데 임금지불액이 감소해 이익이 증가하면 왜 투자가 늘어나는가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일찍이 하시모토 주로(橋本寿朗)는 1990년대 노동분배율이 상승하여 기업이윤이 줄어들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노사(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전국조직)가 협조하여 임금수준을 조정하고 장래의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12]

그러나 이 방책은 기업부문에 잠재적으로는 투자의욕이 있고 자금제약

12 橋本寿朗, 『デフレの進行をどう読むか: 見落された利潤圧縮メカニズム』, 岩波書店, 2002.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조에 의한 임금 인하 합의와 함께 기업에게 적극적인 투자행동을 의무화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서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후의 전개에서 나타난 바는, 일본경제의 미래상에 비관적인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앞의 〈그림 1〉에 있는 것처럼, 공전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에 소극적이고 필요한 갱신투자조차도 늦추려 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투자 확대를 위한 수익의 확보에 임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임금 인하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는 투자수요의 침체에 더해 국내 소비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고용불안을 부추긴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에 일방적인 해고의 자유를 주자는 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대는 돌고 돌아 자사제품의 구매자가 될 소비자라는 점이다.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져 구매력이 떨어지니 수출밖에 탈출구가 없어진 것이다.[13] 국내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내 소비자에게 자사제품의 구매를 기대한다면 국내 고용에서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제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다. 주주만을 보고 있다면 국내시장이 축소될 위험이 높다.

개별 기업이 바람직한 판단을 했다고 해도 국민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고 '합성의 오류' 등 현학적인 표현으로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도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기업의 경영능력이 제품의 혁신, 생산현장의 생산성 상승, 또는 자금의 적정한 관리 등이 여러 측면에서 불충분하고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 대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기업이 진지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13 이러한 관계는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주의에 대해 대중궁핍화를 초래하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상기시킨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개선시켜 왔다는, 마르크스의 지적에 반하는 움직임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책 제언에 동조하고 있다.

4. 지구환경과 자원의 제약

1) 온난화의 위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궤도로 복귀하려는 욕망에 의해 추진된 여러 대책은 모두 한계에 도달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무언가 정책과제의 설정방식에 잘못이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정책적인 대처가 미로에 빠져 있고 헤쳐나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계속 추구해서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때문에 서두에서 소개한 킨들버거의 문제제기를 상기하면서 경제성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이 양적인 확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단계에서는 인간사회가 그릴 수 있는 미래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경제발전의 한 단계를 지나면 그 목표는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신장이나 체중을 생각해보자. 성인이 되면 신장이나 체중은 더는 성장지표가 아니다. 체중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비만'이라는 병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지표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적인 성숙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된다. 이것이 경제발전이 함의하는 질적인 '발전'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비유에서 명백해지듯이,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의 부분적인 지표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국민생활에 대한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국민 1인당 GDP가 1960년대 이후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생활만족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1958년부터 1991년까지 국민 1인당 소득이 6배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인의 생활만족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국제비교에서도 1인당 1만 달러를 넘으면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는다.[14] 선진국 국민은 물질적 풍요로는 더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성숙단계에 있는 것이다.

킨들버거의 문제제기는, 아직 개발도상국이 세계에 널리 존재하고 그 개발이 중요한 과제였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 시기에서조차 그는 양적 확대만을 추구해서는 경제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기아와 빈곤과 분쟁에 시달리는 지역과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반면, 과거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급격한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바로 지구환경 문제다. 지구라는 닫힌 공간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인류에게 없다고 한다면 온난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억제에 민족, 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협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뿐인 우주선 '지구호'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수단은 없다.

온난화 효과를 가져오는 가스 배출이 없다는 이유에서 에너지 공급의 주역으로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원자력발전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안전성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에서 볼 때 값비싼 에너지원임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원자로를 재가동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선택으로 일시적인 공급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언젠가는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방사성 폐기물과 폐로작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가스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기술 조건을 전제로 하면 고가격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구환경을 보전하

14 フルーノ·S·フライ/アロイス·スタッファー,『幸福の政治経済学』, ダイヤモンド社, 2005(원저는, Bruno S. Frey & Alois Stutzer,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역자).

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그러한 대책에는 경제발전을 중시해 배출규제에 소극적인 개발도상국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면, 경제규모의 확대는 더 이상 추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게 된다. 이 자명한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2) 천연자원의 공급 제약

소중한 것은 지구환경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천연자원이 과거 2세기 동안 세계적인 산업화 속에서 급속히 고갈되고 있다.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이 장기간의 자연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원은 기본적으로 재생불가능하며, 자원개발은 확실히 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 이는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다.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언제 고갈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고갈에 직면했을 때 대체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생활의 만족도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필요한 자원량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인구 13억 6천만 명의 중국의 1인당 GDP는 6,747달러이므로 이것을 1만 달러로 높이는 데는 현재의 1.5배의 자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구 수로 나타내면 중국인 6억 6천만 명분이 된다. 인도는 1,504달러이기 때문에 6배 이상의 자원이 필요하고 역시 70억 명의 인도인이 소비할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 즉, 이 두 나라만으로도 현재의 세계인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자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1만 달러 수준의 생활환경이 실현될 수 없다.[15] 개발도상국의 생활상태를 낮은 수준으로 억누르는 것은 정치적 긴장을 강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가능한 한 허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을 지구라는 한정된 원천에서 짜내야만 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15 武田晴人, 『脱成長神話』, 214쪽 참조. 원자료는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2014년 4월 판).

가능할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사태가 다가오면 문제가 되는 자원의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던 다른 자원을 이용하게 되고 고갈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자원의 재발견·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또는 대체자원의 개발에 투자가 확대되어 반드시 대체자원이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 그러한 자원개발 기술이 발견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논할 때 이러한 낙관주의에 몸을 맡긴 채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 어려움을 넘겨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인류사적인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 앞에서는 당장의 주식시장 변화라든지 경기상황 변화 등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틈이 없다.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재활용 비용을 사회적인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부담할 필요가 있다. 재정문제에서 과도한 정부부채가 차세대에 전가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세대간의 불공평을 낳을 수 있는 문제, 즉 지구환경의 유지와 자원보전을 위한 비용을 현재의 세대가 떠맡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터무니없는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

5.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1) 요구되는 생산성 상승과 기대 효과

환경과 자원에 강력한 제약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각자의 몫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물적 자원, 구체적으로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총량에는 한계가 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롭다고 해도 거기에는 천장, 즉 한계

가 있기 마련이다. 선진국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데 매몰된 경제운영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나타나는 경제 격차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선진국은 멈춰 서야 한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 상황에서 멈추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없다. 선진국은 이제까지처럼 경제규모의 확대라든지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형태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글로벌한 관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지, 기업의 끝없는 이윤추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멈춰 서는 것, 즉 제로성장을 상정한 미래상의 검토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환의 방향을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경제성장을 논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확실히 그렇다. 그런데 이 생산성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성은 단위당 노동시간에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는지를 측정한다. 즉 '노동생산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널리 퍼져 있는 이 생각에 경제학자가 특히 집착하는 배경에는, 맬서스(Thomas R. Malthus)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간의 차이에 의해 인구과잉, 즉 빈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점과 공통되는 자원제약에 대한 사고방식의 영향이 있었다. 맬서스는 토지라는 생산자원의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생산성 상승의 한계가 인구성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주목했다.

그에 비해 근대적인 공업사회에서는 식민지화 등으로 식량공급의 제약을 완화하면서 선진공업국이 번영을 구가해왔다. 식량공급의 제약이 줄어든 반면에 급격한 경제발전은 인구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전했다. 그 결과, 노동임금의 상승이 장기적인 추세가 되었다. 경제규모의 확대를

사회적 합의로 성립시킨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 자본의 양보, 즉 근로자의 생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노동은 희소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절약하지 않으면 자본수익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다. 즉 맬서스적인 제약은 공업화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자원에 의해 현재화(顯在化)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경제성장을 표현하는 초보적인 모델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을 표현하는 모델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부가가치의 산출량이 결정되는 간단명료한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투입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원자재도 있는데 모두 공급제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자원제약의 심각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 이외의 자원제약에 대해서 경제이론은 낙관적이었다. 그에 비해 노동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좀 더 중시해야 할 지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방식에 대해 관점을 바꾸어 노동을 지출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은 노동생산성의 추구에 따라 즉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일하는 것은 소득의 확보·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확실히 있다. 즉 단위노동시간당 산출량의 증가는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켜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로움'에 가깝게 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로 직결시키는 것은 단선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의 증대만으로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금전소득의 최대화라는 노동자상'은 단순히 경제학자의 이론적 틀에 모순이 없도록 상정되었을 뿐이다. 즉,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는 이론적인 가정은 경제이론에서는 당연한 설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론이 비현실적이라면 가정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 사람의 1일 활동을 노동시간과 그 이외의 시간—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여가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정의가 시야를 좁힐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술한다—으로 나눈다. 먼저 노동시간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과 '일에 대한 만족도'를 상정한다. 한편, 노동 이외의 시간에 대한 대가는 '비구속적인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한다.

이러한 틀에 따라 사람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하고 그 이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전근대적 농업사회에서는 낮은 생산성의 결과, 생존을 위해 돈 버는 시간(노동시간)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업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작아졌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일상의 활동시간에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라든지 마음의 풍요로움을 축적하는 시간 등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의 사용법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지가 많아져서 고도성장기 일본의 샐러리맨에게 붙여진 '맹렬 사원'처럼 전력을 다해 장시간 일하는 것이 규범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노동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이외에 일에 대한 만족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맹렬'히 일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보수로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인정된다면, 그렇게 일하는 방식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더구나 비자발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삶과 일의 균형(life work balance)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동시간과 그 이외 시간의 균형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가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경제학적인 인식이 경시해온, 소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만족도와 관련한 논점이 이러한 이해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경제학적인 인식의 틀도 재구축해야 한다.

물론 노동생산성의 개선은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다. 이러한 목표는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대응책인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필요한 돈을 버는 데 드는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준다는

점이다. 케인즈가 1930년경에 손자들의 시대에는 주당 15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예측한 예가 종종 소개되고 있다.[16] 이 낙관적인 예측이 결과적으로 들어맞지 않았는데,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생산성 상승을 노동시간 단축보다 소득증가를 위해 사용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생산성 상승의 성과가 모두 소득 증가로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와 여가시간 증가라는 두 가지 과실을 모두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소득 증가보다 노동 이외의 시간 증가를 선호하려는 선택 틀의 변화다. 절약된 노동시간은 다양한 인간활동에 사용된다. 자원이용의 기회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는 이상, 선진국에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생산량 확대가 아니라 필요 노동시간의 절약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절약분은 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인간활동에 이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동의 시간에 만족도라는 보수를 상정하는 의미도 명확해진다. 절약되는 것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지 자원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리기업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분야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이러한 활동은 인간 노동 능력의 지출이지만 노동시간이라고는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공급 부족을 보충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자발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에 쓰게 되면 그 사회의 활력이 높아진다. 그 점에 대해서는, 케인즈와 뮈르달(K. Gunnar Myrdal) 등 경제학자들이 제로성장사회를 논할 때 한결같이 지적해온 것, 즉 지속 가능한 제로성장경제의 활력은 사람들의 행동이 경제적인 걱정에서

16 노동문제에 대한 필자의 포괄적인 파악방식은 武田晴人, 『仕事と日本人』, ちくま新書, 2008 참조.

자유롭게 됨으로써 나타난다고 강조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17]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활기차게 계속하는 것이 우리 생활방식의 폭을 넓히고 만족도를 높인다. 사람들의 재능은 다채로우며 하나의 일에 묶여 있지 않다. 돈 버는 시간으로 발현될 기회가 닫혀 있던 그러한 재능과 욕망에 개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절약되는 노동시간의 의미가 있다. 그러한 측면이 평가되지 않는 이유는, 그 활동의 대부분이 '소비'라는 범주에 뒤섞여버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되풀이하지만, 섀도 워크가 국민경제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이러한 활동이 측정되지 않는 국민경제계산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급제약이 강해지는 것은 노동이라는 자원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전반이기 때문에 물질적 수준에서의 생산성 상승도 추구해야만 한다. 이는 원단위의 개선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다. 즉 투입·산출의 비율 개선에 의한 원재료 등의 손실 감축,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자원 재활용 등이 필요하게 된다. 사용이 끝난 자원에서 회수한 자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원의 사용량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재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자원절약적인 대처 없이는 자원의 공급제약에 의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점차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폐지와 페트병의 회수 등이 이미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가전 등도 재활용이 의무화되어, 그것을 위한 비용부담도 필요해졌다. 제품설계의 연구도 더디긴 하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은,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외부성(外部性)으로 등한시되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 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17 잘 알려진 밀(John Stuart Mill)의 정상(定常) 상태에 대한 검토는 케인즈 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리된 연구서 가운데 하나로, K. E. ボールディング・E. J. ミシャン 編, 林雄二郎監 訳, 『ゼロ成長の社会』, 日本生産性本部, 1974가 있다(원저는 K. E. Boulding & E. J. Mishan eds. *The Non-Growth Society*, W. W. Nortum & Company, 1974).

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한 미래사회가 구축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이 경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 바람직한가라는 공통의 인식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정책적인 조치로서 실현해나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이 절약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처럼 노동에만 초점을 맞춘 생산성 향상 노력, 노동비용의 절약을 최대과제로 하는 기업경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경제활동의 주요 조류가 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에는 기술진보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절약, 광물자원 절약 및 지구환경 보전 등은 기술적인 해결책에 의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의 절반에서 계속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 지금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기술연구 등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공적 자금 투입 등의 조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2) 기업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역할

경제사회의 미래상을 논할 때 공적인 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적에서 명백해졌다. 그렇다고 그것이 당장 '큰 정부'를 구상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시장이 어떤 조정역할을 담당할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조직으로 봤을 때 기업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 즉 특정한 생산 분야에 관한 정보의 덩어리로서 그 어떤 다른 조직보다 우월하다.

이는 기업의 특성으로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약 1세기 전에 경제학자 베블렌(Thorstein Vebl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조직은 기술합리성을 철저히 추구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특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영리라는 목적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술적인 합리성의 발현이 제약되는 문제점도 강조했다. 이 지적은 지금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영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에 공헌하기 위한 고속 엔진을 갖추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주역의 지위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자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비용으로써 외부의 부담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공해문제와 폐기물이 그러한 기업행동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한 없는 영리추구는 규제되어야만 한다.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허위 표기는 일단 밝혀지면 소비자가 거절함으로써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시장의 역할 중 하나지만, 그러한 시장의 역할에 기대하고 사전적인 규제를 방기하는 것은 허위 표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회계장부를 분식하여 투자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기업경영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반론의 여지는 없다. 기업행동의 자유를 억제한다 해도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선량한 기업이라면 규제 때문에 행동을 제한받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반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개별 기업이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사의 성장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데 있다. 일탈된 행동은 이러한 강박관념이 기업행동에 영향을 준 결과다. 따라서 이러한 영리기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생산조직으로서의 기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리'라는 목적을 부차적인 것, 혹은 목적에서 제거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생산활동과, 그에 따라 증가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활동은 재해 시에 발견되는 자원봉사 등의 일시적인 활동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급속히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 비영리조직이 담당한다.[18] 생산조직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그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다르지 않다. 자금제공자는 금전적인 수익이 아닌 투자처의 활동에 대한 공감과 만족을 수익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의 하나로서 일에 대한 만족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자금제공자에 대한 금전적 수익의 유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지 못한다. '돈만을 중시하는'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해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이, 사회적 재생산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확장해나가는 것은 영리기업의 원리로는 충족시킬 수 없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정비로 이어진다. 수익을 내기 어려워 비영리조직이 담당하는 서비스는 전통적인 사고로 보면 정부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서비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정부 역할을 복원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원 확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서비스로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기민하게 행동하는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하면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처럼 유리한 생산거점에서 생산하고 소비지로 수송하여 소비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키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이 조직은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동시에 소득

18 武田晴人,「営利組織と非営利組織: その機能と持続性」,『日本の未来と市民社会の可能性』, 言論NPO, 2008.

이외의 보수를 기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돈 버는 데 쓰는 노동 이외 시간의 사용 방법으로 유력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일하다'(働く, 하타라구)는 말에는 옆(傍, 하타)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楽, 라쿠)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일본인들도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일하기'를 확장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 확대로 연결될 것이다.

기업과 함께 시장 메커니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가격정보 등이 전제되면 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에 일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아베노믹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은 부적절하며 중앙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본연의 직무로 되돌아가야 한다. 가격이 안정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돈에 구애 받지 않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균열로 장래에 대한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강화되고 시장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투기적인 가격의 급등락은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투기적인 시장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 행동을 억제해야 한다. 시장이 활력을 잃는다고 투자가로부터 비판 받을 수도 있겠지만 투기활동은 일부 부유층을 만들 뿐이고, 사회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그대로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 그러한 주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그 메커니즘이 완전하다면 투기 활동을 할 여지가 없어지고 금융자산 보유자는 평균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투기꾼들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쉽게 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품에 편승한 '횡재'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의 여지를 계속 남겨둔다면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투기꾼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문단속이 허술한 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는 투기 활동의 억제뿐만 아니라 경쟁 결과에 의한 소득 격차를 조정하는 분배 차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수단은 세제와 사회적 급부 등으로 다양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매우 크다. 이러한 격차의 조정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세계가 계속된다. 전장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제 격차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 확대의 성과를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19]

6. 결론: '선진국의 미래'인 일본이라는 인식

선진국은 '제로성장'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해나가야 한다. '제로

19 잘 알려진 대로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GDP 등의 지표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지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를 늘리거나 무력 개입을 하면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규모는 확대된다. 또 환경파괴가 진행되어 공해방지 투자가 필요해진다든지 전염병이 만연하여 의료비가 증가해도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표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장'을 받아들이면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계속되는 일본의 '경제침체'도 다르게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현상은 선진국이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제로성장' 시대의 선구적 모습인 것이다. 즉, 일본은 선진국 경제의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 경제학자, 매스컴에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앞으로 일본을 짊어질 젊은이들이 태어나 자란 시대를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담론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기간이 마치 무의미하고 성장해야 할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자의 오만을 나타내는 말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니다. 현재 일본에서 '제로성장'이 계속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시대착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경제성장 시대를 지탱하고 있던 기반이다.

경제성장이라는 주술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다. 경제발전의 원점으로 돌아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10년, 20년을 새로운 다음 시대의 경제사회시스템을 모색해가는 도전 과정으로 다시 규정하고 그 시행착오의 내용을 검증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과 자원에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진보와 제도적인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돈을 버는 데 쓰는 노동 시간을 줄여 좀 더 많은 시간을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돌리게 되면 그 시간의 일부를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발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것이 향후의 과제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킨들버거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민주화', 즉 정치결정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인 결정에 기초한 정책선택과 제도설계에 의해 성숙된 경제사회에서도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신의 개성을 살린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각자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그것이 '정상(定常)상태'라 불린 적도 있는 경제사회의 미래상인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배석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이 번역했다.